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5년 11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24일(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조정과 오광해 과장(043-870-5550), 진상언 연구사(5556)

기업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포럼 개최

- 기업활동 및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개선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방안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제2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15.11.24(화) 엘타워(양재동) 매리골드홀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기업과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기술규제 :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
예)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기술규제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정책제언 등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27일 출범한 바 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이 소개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 및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먼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의 추진현황을 소개 하였고,

*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 표준, 국제 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
* 영향평가건수 : 총 1,243건 ('13년 291건, '14년 409건, '15년 11월 현재 543건)

○ 이어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신재생에너지 [illegible]'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바 있는 유사·중복 인증 통합·정비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어진 민간전문가 발표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가 '기술규제와 표준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기술기준에 표준을 활용할 경우의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하였고,

○ 바이테리얼즈 김준성 대표는 '신기술 관련 규제에 대한 국내외 대응사례'를 통해 미국, EU, 일본 등의 신기술 대응 정책을 다루었다.

□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박순길 센터장은 기술발전과 규제의 엇박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간의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법제연구팀장은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완화'의 관점보다 '유지 또는 합리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금일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앞으로도 기술규제정책포럼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당부하였으며,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본 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포럼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진상언 연구사(☎043-870-5556)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2차 기술규제정책포럼 프로그램[안]

□ 행사 프로그램(안)

【11. 24.(화)】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개회	14:00~14:05 (5분)	개회	사회자
인사말씀	14:05~14:10 (5분)	개회사	고동수 포럼위원
	14:10~14:15 (5분)	인사말	국가기술표준원장
	14:15~14:20 (5분)	축사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정보공유	14:20~14:35 (15분)	국표원 기술규제 대응 정책 소개	국표원 기술규제조정과장
	14:35~15:05 (30분)	기업애로 발굴·해소 활동 추진 경과	포럼 사무국
	15:05~15:20 (15분)	인증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
	- 커피 브레이크(20분) -		
	15:40~16:00 (20분)	기술규제와 표준과의 역할 정립	이종영 교수
	16:00~16:20 (20분)	신기술 관련 규제에 대한 국내외 대응사례 및 시사점	김준성 포럼위원
패널토론	16:20~17:00 (40분)	- 주제발표 및 토론 - 기술혁신·경쟁력 저해요소 해소 및 현행 규제 시스템 개선	전문가 8명
	17:00~17:20 (20분)	질의 응답	사회자
폐회	17:20~17:30 (10분)	폐회 및 정리	사회자

□ 주제발표 및 토론자 명단(안)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급	비 고
정부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장	토론자
오피니언리더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배제대학교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	좌장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토론자
정책전문기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토론자
피규제자	박순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센터장	토론자
	김준성	바이테리얼즈 대표	토론자
	권태우	한국건설기계협회	토론자

참고 2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요

○ **(목 적)** 기술규제 분야 피규제자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정책 반영을 통한 기술규제 개선을 위해 발족('14.10.27.)

* 파급효과가 큰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논의, 부적절한 기술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안 도출 등 기술규제정책 방향성 제시 등 정책제언

○ **(구 성)** 운영위원회(의사결정 및 정책자문), 사무국(한국표준협회) 및 분과위원회(화학·환경 등 4개 분과)로 구성

* 분과 간사기관 : 전기·전자·의료(KEA), 화학·에너지·환경·식품(KTR), 건설·기계·금속(KCL), 조선·자동차·항공(KTC)



○ **(운 영)** 기업애로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제도개선 토론 등을 위한 기술규제정책 포럼을 개최

* 포럼의 결과물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협의 등

참고 3 패널토론 참여자 주요발언 요지

1. 기술규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제언 (이종영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그동안 '전통적 법·규제학' 연구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규제가 최근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법적 관심영역으로 대두
-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 하도록 기술규제 체계를 합리화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2. 글로벌 기술규제와 국내 기술규제의 조화방안 (이광호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글로벌 기술규제는 자유무역주의 확대와 더불어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부담을 가중
- 국내 기술규제와 글로벌 기술규제 간 부합성 제고와 더불어 능동적 대응 및 시험 인증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

3. 기술규제의 선진화 방향성 정립 (박순길 센터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기술발전과 규제의 엇박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간의 역지사지와 CTC(Chance, Timing, Communication) 관점의 소통 노력이 필요

4.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향 (김성천 팀장, 한국소비자원)

-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는, '완화'의 관점보다 '유지 또는 합리화'하거나 '규제 공백 해소' 관점의 접근이 필요
- 소비자 권익 증진의 측면에서 인증 등 기술규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수준이 항시 유지되도록 해야 함

5. 민간기업 관점의 기술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김준성 대표, 바이테리얼즈)

- 기술규제 시스템이 정부당국자 및 일부 연구기관 관계자의 제한된 논의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민간 기업들의 현장 규제 수요 및 애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현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한 기술규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6. 협단체 입장에서 기술규제정책포럼 참여 소감 (권태우 실장, 한국건설기계협회)

- 기술규제정책포럼이 산업계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기대